

생태정치와 기본소득 (1)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현대적 의미의 기본소득이 정립되던 시기에 기본소득에 대한 생태주의적 옹호가 주요한 흐름 가운데 하나였던 것을 감안하면, 기후변화의 도전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느껴지는 지금 생태주의에 근거한 기본소득 주장이 크게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아이러니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 경제성장론이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이자 담론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인지 최근 부상한 기본소득 주장은 ‘일자리 없는 미래’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낙관적인 대응인 녹색 뉴딜의 경우, 기본소득에 반대하면서 일자리 보장을 주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과 함께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도모하는 사람들에게 현재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의는 하나의 도전이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은 좌우의 어느 이데올로기에 속하지만 기본소득 자체는 좌도 우도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소득은 생태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것은 규범적인 방식의 정당화와 달리 기본소득의 효과에 주목하고 그 효과가 이른바 생태적 전환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하는 데서 나온다. 이때 보통 말하는 기본소득의 효과란 (완전)고용을 위해 경제성장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것, 시장 노동 이외의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 이런 활동이 탈물질적이고 관계적 활동일 수 있다는 것, 더 나아가 자본주의적인 소비 주체가 아닌 새로운 주체성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등이다. 하지만 효과에 주목해서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노동시장 참여 및 경제활동 촉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본소득에 대한 생태주의적 옹호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이는 어떤 기본소득인가, 그리고 기본소득은 어떤 다른 정책, 제도, 가치 등과 결합할 때 이른바 진보적일 수 있는냐는 질문을 던진다.

게다가 지금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생태적(기후적) 도전은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기본소득이 생태적 전환에 미칠 수 있는 효과를 말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직면한 생태적 도전과 그 해법을 정리하는 일이 필요하다.

성장의 한계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녹색 뉴딜로

인류의 진보에 대한 믿음과 관련해서 20세기는 홉스봄이 말한 것

처럼 “극단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전반기, 특히 제1차 세계대전부터 대공황을 거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까지가 비관주의가 고조된 시기라면, 전후 시기, 특히 1950년대와 60년대는 낙관주의적 견해가 그 자리를 대신한 때였다. 유례없는 호황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생활수준 향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 시기 신생국가의 발전과 관련해서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면서 낙관적 전망과 치열한 대결을 벌였던 근대화론과 종속이론 모두 물질적 성장 자체를 당연시했다는 점은 이 시대의 에피스테메를 드러낼 뿐이다.

하지만 이렇게 산업적, 상업적으로 팽창하던 시기에 환경 위기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문제는 인간의 진보를 가능케 한다고 보았던 과학과 기술의 발전 자체가 인류의 퇴행과 인간의 삶의 조건, 즉 자연환경의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 속에서 급속하게 늘어난 물질적 생산과 소비는 급속한 인구 증가, 오염, 자원 고갈을 초래했고, 이는 인간이 생존하는 환경 자체에 위협을 제기했다. 레이철 카슨의 『침묵의 봄』(The Silent Spring, 1962), 폴 얼리히의 『인구 폭탄』(The Population Bomb, 1968), 에드워드 골드스미스의 『생존을 위한 청사진』(A Blueprint for Survival, 1972), 프리츠 슈마허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 1973) 등은 이런 위협에 대한 경고이자 대안을 제시하려는 시도였다.

이렇게 성장의 한계 혹은 파괴적 결과에 대한 인식이 퍼져 가는 가운데 오일쇼크(1973년)가 일어났고, 오일쇼크 전후로 시작된 경제 위기는 무제한적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를 약화시켰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면서 환경 위기에 대한 최초의 슬로건이 된 “성장의 한계”라는 관념이 등장했다. 1972년에 발간된 『성장의 한계』는 이런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진단을 내린다.

세계 인구, 산업화, 오염, 식량 생산, 자원 고갈의 현재 성장 추세가 변하지 않고 지속될 경우, 이 행성에서 성장의 한계는 다음 백 년 내 어느 시점에 도달할 것이다. 가장 그럴듯한 결과는 인구와 산업 능력 모두에서 다소는 갑작스럽고 통제할 수 없는 쇠퇴일 것이다. (23쪽)

이를 전후로 하여 제한받지 않는 경제성장이 정치적 의제로 올랐는데, 고도의 경제성장이 바람직한지 혹은 심지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둘러싼 논쟁이 시작되었다.

한쪽 극단에는 성장 옹호론자들이 있고 다른 쪽 극단에는 에코사이드(ecocide)라는 음울한 전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이 논쟁이 잠정적으로 해결된 것은 1980년대 이후였고, 이때 등장한 슬로건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이 개념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발전은 자원의 이용[착취]으로, 보존은 자원의 보호로 이해되었지만, 이제는 발전과 보존의 타협으로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이 등장한 것이다.

1987년에 유엔은 22명으로 이루어진 세계환경발전위원회(브룬트란트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제사회를 위한 장기적인 환경 전략 구상을 의뢰했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브룬트란트 보고서, 즉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1987)다.

이 보고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정의한다(p. 43). 이때 지속 가능한 발전의 근본적인 세 가지 구성부분은 환경, 경제, 사회이며, 사회적 형평, 경제성장,

환경 유지가 동시에 가능하다고 본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일종의 “모순어법”이라는 지적에서 알 수 있듯이, 발전 개념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덜 발전한 나라들이 경제 개발을 통해 생활수준을 높이면서도 미래 세대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발전한 나라들이 덜 성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서방’이 ‘나머지’ 지역에 실질적인 소득을 이전해야 한다. 이로부터 나오는 또 다른 문제들은 과연 지속 가능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지속 가능성인지 등이다(Du Pisani, 2006; Luke, 2005).

하지만 이렇게 모호하고 현실에서 실행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1992년 리우 정상회의(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은 각국 정부, 비정부기구(NGO), 기업 등이 널리 받아들이는 개념이 되었다. 이후 지속 가능한 발전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구성물로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발전도 아닌 것”을 덮어 주는 수사적 장치로 작동했다 (Mensah, 2019).

이미 제기된 지 십 년이 넘었지만, 압박한 기후위기와 지속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글로벌) 녹색 뉴딜이다. 2008년 경제위기를 전후로 하여 등장한 녹색 뉴딜의 기본적인 문제들은 현재 인류가 삼중의 위기(신용 위기, 기후변화, 자원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결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 자원의 한계성을 고려하면서 1930년대의 뉴딜 정책을 재 활성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금융과 조세의 개혁, 에너지 부문의 개혁(탈탄소화), 일자리 보장이다(Green New Deal Group,

2008).

녹색 뉴딜은 생태적 필요와 사회적 요구를 둘 다 만족시키는 경제의 재조직화를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우선 투자를 막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시장을 규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 부문과 지속 가능한 교통의 인프라에 투자하고자 한다. 또한 노동과 고용도 이러한 부문을 일차적인 목표로 한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탄소 기반 생산을 재생에너지로 완전히 대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녹색 뉴딜은 이런 점에서 과거의 뉴딜을 따라 (공공) 인프라 투자를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는다. 최근 다시 제기된 녹색 뉴딜의 경우,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자 한다는 점이 초기 녹색 뉴딜과 다른 점이다. 물론 이럴 경우, 계속되는 저성장과 질 나쁜 일자리의 증가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제대로 된 일자리의 보장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이와 함께 생태적, 사회적 전환이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공공 교육의 강화, 공공 의료 서비스의 강화, 그리고 전환 과정에서 부담을 크게 질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를 주요한 정책의 하나로 내세운다.

다양한 입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녹색 뉴딜 전체를 싸잡아 새로운 산업정책 혹은 성장 기반 프로그램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Bauhardt, 2014). 영국 녹색 뉴딜 그룹의 일원이자 『녹색 뉴딜: 신용 위기, 기후변화, 높은 석유 가격이라는 삼중의 중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결함 정책』의 공동 저자인 앤 페티포어가 새롭게 출판한 『녹색 뉴딜 옹호』(2019)는 녹색 뉴딜 경제의 핵심 원칙 가운데 하나로 “정상 상태 경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술적 전환과 (노동조합이

있는) 공식적 일자리에 대한 강조는 녹색 뉴딜이 여전히 전통적인 경제성장 관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탈성장

다른 방식의 개발이나 성장이 아니라 하나의 패러다임으로서의 성장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구성하자고 말하는 게 “탈성장^{degrowth, décroissance}” 개념이다. 탈성장은 “하나의 정의로 설명하기 불가능”하며, “다양하게 해석되며, 다양한 이들이 여러 각도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탈성장으로 모이고 교차하는 여러 흐름을 검토하는 편이 낫다(달리사의 2018, 15쪽, 14쪽; Martinez-Alier, 2012).

탈성장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기한 것은 앙드레 고르츠다. 고르츠는 1972년에 누벨 옵세르바퇴르 클럽이 연 토론회에서 “지구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질 생산에서 무성장, 나아가 탈성장이 필요조건”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몇 년 후 『생태주의와 정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직 한 사람의 경제학자, 즉 니콜라스 게오르게쿠스-뢰겐만이 제로 성장에서조차 최소한 자원을 계속해서 소비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를 완전히 소모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 상식을 가지고 있다. 요점은 더 많은 소비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덜 소비하는 것이다. 미래 세대를 위해 남아 있는 자원을 보존하는 다른 길은 없다(p. 13).

그는 이것이 “생태주의적 현실주의”라고 말하며, “경제성장이 여전히 인간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고 여전히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상상하는 것이야말로 현실주의가 결여”된 것이라고 덧붙인다(p. 14).

앙드레 고르츠의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탈성장의 첫 번째 흐름은 생물경제학 혹은 생태경제학이다. 이 흐름은 자원 고갈 및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제한의 문제를 다룬다. 따라서 탈성장은 자원과 처리 용량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두 번째 흐름은 문화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 흐름은 글로벌 사우스의 나라들이 미국과 유럽의 발전 모델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비판하는 인류학자들에게서 나왔으며, 프랑스의 탈성장주의 철학자인 세르주 라투슈가 대표한다. 이들은 칼 폴라니의 용어를 쓰자면 일반화된 시장 체제의 틈입(irruption)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비판한다(라투슈, 2014).

세 번째 흐름은 민주주의에 대한 추구, 즉 경제적, 사회적 체제를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열망이다.

네 번째 흐름은 생태주의인데, 이때 생태주의란 살아 있는 존재들을 그 모든 차원에서 존중하면서 생태계를 옹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삶의 의미, 그리고 이와 연관된 다양한 운동, 대표적으로는 자발적 소박함(voluntary simplicity)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Schneider et al., 2010).

이런 흐름 속에 있는 탈성장은 지속 가능한 발전 혹은 “녹색 성장”을 비판하면서 사회적, 생태적 위기의 원인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드러낸다. 영어권의 대표적 탈성장론자인 팀 잭슨은 이렇게 말한다.

진실을 말하자면 90억 명의 세계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확실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시나리오는 아직 없다. 이런 맥락에서 효율성을 지향하는 자본주의의 성향이 우리로 하여금 기후를 안정시키거나 자원 희소성을 막게 할 것이라는 단순화된 가정은 망상이나 다름없다 (잭슨, 2013, 116쪽. 번역은 수정).

탈성장론에서 말하는 또 다른 중요한 지점은 소비를 “성장 모터의 핵심”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는 어떤 재화를 생산할지를 결정하고, 이는 더 높은 임금에 대한 요구를 추동하며, 이는 다시 더 많은 재화에 대한 수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성장의 모터이며, 이는 악순환일 뿐이다. 따라서 의식적인 소비 혹은 양심적 소비 거부가 필요한데, 이는 쇠퇴가 아니라 개인 수준과 사회 수준 모두에서 더 높은 질의 삶으로 이끄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기존의 성장과 소비를 비판하는 탈성장론자들은 제한limits, 돌봄care, 지출dépense 등으로 자신들의 제안을 구성한다(Kallis, 2015).

우선 탈성장론자들의 제안에는 탄소 배출에 대한 한도나 은행의 100% 지급준비금 제도 같은 집단적인 제한이 들어 있다. 더 나아가 제한된 크기와 제한된 복잡성이 있는 사회체제만이 직접적으로 통치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럴 때 화석연료나 핵발전은 오염 때문에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관료와 테크노크라트에 의해 관리되는 에너지 집중적이고 복잡한 기술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다.

돌봄은 팽창이 아니라 재생산에 기반을 둔 경제의 특질이 될 수 있다. 재생산은 삶의 순환을 지속시키는 활동을 가리키지만, 좀 더 일

반적으로는 유지와 회복의 모든 과정을 포괄한다. 그리고 탈성장론은 돌봄 노동의 평등한 분배와 사회가 돌봄을 중심으로 재중심화될 것을 주장한다.

지출은 사회적 잉여의 비생산적 지출을 말한다. 기본적인 인간적 필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것을 넘어서는 잉여를 어떻게 할당하는가가 문명의 집단적 성격을 드러낸다. 따라서 탈성장론은 과도한 소비를 제한하고 잉여를 줄일 뿐만 아니라 잉여를 새로운 방식으로 지출할 것을 주장한다.

탈성장으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실천과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다양한 실천은 다양한 자발적인 운동 속에서 등장한 것인데, 도시 농업, 공동 주거co-housing, 생태 코뮌, 대안적 식량 네트워크, 생산자-소비자 협동조합, 공동 부엌, 생활협동조합, 오픈 소프트웨어, 분산된 재생에너지 생산과 분배 등이 있다, 이러한 활동에는 지역화폐, 교환 시장, 타임뱅크, 신용협동조합 등이 수반된다.

이렇게 탈성장으로의 이행은 기본적으로 아래로부터의 흐름이지만, 이러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기본소득, 일자리 보장,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등이 포함된다.

생태적, 사회적 전환에서 기본소득이 겨냥할 수 있는 것

생태적, 사회적 전환을 위해 기본소득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말하기 전에 먼저 이를 둘러싼 몇 가지 토픽을 확인해 보자.

첫째, 자연의 한계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다. 이때 쟁

점은 태양에너지가 지구 전체의 엔트로피 증가를 줄일 수 있는가다 (Schwartzman, 2012).

둘째, 인류가 현재 직면한 기후위기가 얼마나 긴급한 것이고, 이에 따라 지구적 수준에서 얼마나 대규모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문제가 있다(Fraser, 2017).

셋째, 생태적, 사회적 전환이 얼마나 정의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다. 20세기의 민주주의가 탄소에 기반한 것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사회적 정의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행의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느냐는 전략의 문제이기도 하다(미첼, 2017).

넷째, 자본주의와 산업주의가 현대적인 경제인과 소비 주체를 형성한 것처럼 생태적, 사회적 전환이 새로운 주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있다면 그 지점과 방식은 무엇인가다.

이런 쟁점들이 최소한 잠정적으로나마 해결되고 방향성을 가질 때, 그리고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보완적인 제도들이 마련될 때, 전환 과정에서 그리고 전환 이후에 기본소득의 위치가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시기에 따라 변동할 수는 있지만, 기본소득의 재원과 기본소득의 지급 규모도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참고 문헌

달리사, 자코보, 페데리코 데마리아, 요르고스 칼리스 편 (2018), 『탈성장 개념어 사전』, 그물코. (G. D'Alisa, F. Demaria and G. Kallis,

Degrowth: A Vocabulary for a New Era, 2015.)

라투슈, 세르주 (2014), 『탈성장 사회』, 오래된 생각. (Pour sortir de la société de consommation: Voix et voies de la décroissance, 2010.)

미첼, 티머시 (2017), 『탄소 민주주의』, 생각비행. (Timothy Mitchell, Carbon Democracy, 2011.)

잭슨, 팀 (2013), 『성장 없는 번영』, 착한 책가게. (Tim Jackson, Prosperity without Growth: Economics for a Finite Planet, 2009.)

Bauhardt, Christine (2014), “Solutions to the Crisis? The Green New Deal, Degrowth, and the Solidarity Economy: Alternatives to the Capitalist Growth Economy from an Ecofeminist Economics Perspective”, *Ecological Economics*, 102.

Du Pisani (2006), “Sustainable Development: Historical Roots of the Concept”, *Environmental Sciences*, June, 3(2).

Fraser, P. (2017), “By Any Means Necessary,” *Jacobin*, 26.

Gorz, André (1980), *Ecology as Politics*, Boston. (Écologie et politique, 1975.)

Green New Deal Group (2008), *A Green New Deal: Joined-up Policies to Solve the Triple Crunch of the Credit Crisis, Climate Change and High Oil Prices*.

Kallis, G. (2015), *The Degrowth Alternative*, A Great Transition Initiative Viewpoint.

Luke, Timothy W. (2005), “Neither Sustainable nor Development: Reconsidering Sustainability in Development”, *Sustainable Development*, 13.

Martinez-Alier, Joan (2012), “Environmental Justice and Economic

Degrowth: An Alliance between Two Movements”, *Capitalism Nature Socialism*, 23: 1.

Meadows, Dennis and Donella Meadows (eds.) (1972), *The Limits to Growth: A Report for the Club of Rome’s Project on the Predicament of Mankind*, New York. (도넬라 메도즈, 테니스 메도즈, 요르겐 랜더스, 『성장의 한계』, 갈라파고스, 2012년.)

Mensah, Justice (2019), “Sustainable Development: Meaning, History, Principles, Pillars, and Implications for Human Action: Literature Review”, *Cogent Social Science*, 5.

Mitcham, C. (1995),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ts Origins and Ambivalence”, *Technology and Society*, 17.

Pettifor, Ann (2019), *The Case for the Green New Deal*.

Redclift, Michael (2005), “Sustainable Development(1987–2005): An Oxymoron Comes of Age”, *Sustainable Development*, 13.

Robins, Paul (2020), “Is Less More …… or Is More Less? Scaling the Political Ecologies of the Future”, *Political Geography*, 76.

Schneider, F., G. Kallis and J. Martinez-Alier (2010), “Crisis or Opportunity? Economic Degrowth for Social Equity and Ecological Sustainability. Introduction to This Special Issue”,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18.

WCED(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7), *Our Common Future*. 